

‘나홀로 집에서’ 달라진 삶... 그 틈에 비대면·구독경제 활황

위드 코로나 시대 <下> 라이프스타일 변화

전국남녀 1000명에 영향력 조사 84%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
취미생활 오프라인→온라인 변화 넷플릭스 결제금액 462억원 기록

2020년 풍경은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외부활동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해 유연하게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학생들은 온라인 등교에 익숙해졌다. 전례없던 전염병으로 바뀌어버린 일상 생활이 가까운 미래에는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대인관계 가장 큰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5세~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력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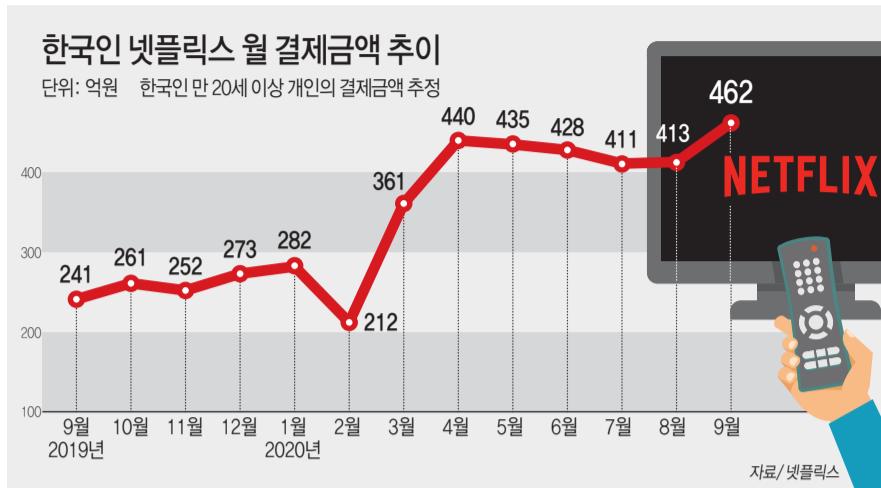
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4%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중에서는 재택근무 경험자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력(재택근무 경험 93.3%, 비경험 81.5%)을 많이 체감하고 있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일상활동의 영역은 ‘대인관계’ (65.4%, 중복응답)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과정에서 친구 및 직장동료와의 만남을 줄이고, 각종 모임을 연기하는 등 대인관계를 피하려는 노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 취미생활·홈시네마족 ↑

취미 생활에도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지는 취미 활동 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취미 생활을 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은 회원수가 올 1월 약 80만명에서 8월 150만명을 돌파하며 누적회원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또, 1월 대비 8



월 거래액은 약 160% 상승, 최고 거래액을 달성했다. 영화관과 공연장 방문 대신 집에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관람하는 홈시네마족도 크게 늘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만 20세 이상 한국인 개인이 지난 9월 ‘NETFLIX’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역대 최고 결제 금액인 462억 원, 결제자는 336만 명으로 추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에 따

라 사람이 모이는 곳을 꺼리는 모양새다”라며 “이에 영화관을 찾는 이들 대신 집에서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유형의 구독 서비스 등장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변화되는 소비 세태와 맞물리는 다양한 유형의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CJENM 오쇼핑부문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핀샵’은 세계과자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세계 각국의 수입 과자



삼성 GSAT 감독관이 온라인으로 응시자들을 원격 감독하고 있다. /삼성

를 정기 배송해주는 스타트업 ‘스넥트립’과 업무 제휴를 맺고 선보인다. 한 달에 한 나라씩, 매월 새로운 국가의 대표 간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미주,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국가가 랜덤으로 선정되는 만큼 매달 어떤 나라의 과자가 안방 1열로 도착할지 기다리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홈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최근 소비 추세에 맞춰 그림 구독 서비스 ‘핀즐’도 론칭했다. 핀즐 큐레이터가 선정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매달 한 점씩 받아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라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판. /연합뉴스

“신혼부부·생애 첫 특공 소득기준 완화”

홍남기 부총리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 내집 마련 기회 더 가지게 추진 특공 30% 소득기준 30%p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

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i964@

기준금리 0.5% 동결... 완화정책 유지

한은 “경제 복귀까지 완화정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0.5%)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16일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1.25%→0.75%)과 5월 28일 0.25%포인트(0.75%→0.5%)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



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의 결문을 통해 “세계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손실규모 확정 전 분쟁조정 추진

추정 손해액 기준 조정결정 배상

감독당국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

약최소 분쟁조정으로 투자원금 반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사모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실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산실사를 끝내 객관적인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먼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하고,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